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일성-호찌민 상봉 사진 유치원에 안치(1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일성 주석과 베트남 호찌민 국가주석이 만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평양 경상유치원에 안치됐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경상유치원 '호찌민반'에서 진행된 안치식에는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장, 북-베트남 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레 쿠앙 바 주북 베트남 대사 등이 참석해 사진에 헌화함.

- **北 김정은, 평양건축大 시찰...건축인재 양성 강조(1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창립 60주년을 맞은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고 유능한 건축인재 양성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학교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등을 둘러보고 "평양건축종합대학은 건축인재 양성의 거점"이라며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함.
 - 더하여 그는 "교육과 생산노동, 이론과 실천을 결합시키며 수재(영재)교육과 박사원(대학원)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교육의 정보화·현대화·첨단화를 실현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라고 지시함.

- **北 김정은, 백두산지구 체육촌 방문(11/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백두산지구 체육촌을 비롯해 양강도 삼지연군(郡)의 여러 곳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백두산지구 체육촌의 실내하키장과 야외스케이트장, 스키슬로프 등을 둘러보고 "나라의 중요한 겨울철 체육기지인 백두산지구 체육촌을 현대적으로 개건(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말함.
 - 그러면서 "체육촌 개건을 당에서 직접 밀어주겠다"며 "체육촌에 일반대중 봉사시설로서의 산악스키주로(슬로프)를 더 잘 만들어주고 인공 잔디를 깐 축구장도 마련해주라"고 지시함.

- **北, 양강도당 책임비서에 리상원 임명(11/30,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행정구역상 백두산 일대를 포괄하고 있는 북한의 양강도 당 책임비서가 김히택에서 리상원으로 교체됐다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양강도 삼지



연군을 방문한 소식을 전하면서 현지에서 김 제1위원장을 영접한 양강도 당 책임비서를 리상원으로 소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

- **北 소설계, 김정은 우상화 작품 창작 나서(12/1, 연합뉴스; 문학신문)**
 -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우상화에 힘쓰는 북한이 소설로 범위를 넓혔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함.
 -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문학신문'(11월 16일자)은 "올해 처음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인적 풍모를 형상한 소설 작품이 창작돼 경제강국 건설에 떨쳐나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고 밝힘.
 - '우리의 계승'은 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이어간다는 내용을 담았고 '불의 약속'은 김 제1위원장의 상징으로 알려진 대규모 불꽃놀이 '축포야회'를 소재로 한 작품임.

- **北, 김정일 2주기 분위기 띄우기..."유훈 관철하자"(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1~3면을 김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과 사진을 실음.
 - 신문은 1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끝까지 빛나게 실현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 온 나라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 없는 흠모의 정으로 세차게 끌어 번지고 있다"라고 선전함.
 - 특히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김 위원장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각급 당 조직에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해 김 위원장에 대한 충정이 최대한 분출되도록 하라고 독려함.
 - 2면에도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장군님 그리움으로 불타는 12월'이라는 글과 함께 김 위원장의 대형 사진을 싣고 12월을 단순한 그리움의 달이 아니라 맹세와 실천의 달로 만들자고 강조함.



■ 김정은동향

- 11/27,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건축종합대학 현지지도(11.27,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총리), 최태복(黨 비서), 리재일·최취(黨 제1부부장들), 마원춘(黨 부부장) 동행
- 11/30, 김정은 黨 제1비서,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 방문 및 군부대 군인들과 기념 촬영(11.30, 중통·중·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김영철(軍 육군대장), 황병서(黨 부부장) 동행
- 11/30, 김정은 黨 제1비서, 삼지연군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 및 삼지연혁명전적지 방문(11.30, 중통·중·평방)
 - 김원홍, 김양건, 한광상, 박태성, 황병서, 김병호, 홍영철, 마원춘 동행
 - 삼지연학생소년궁전, 배개봉국수집, 삼지연문화회관, 백두산지구 체육촌 실내호케이장과 야외스케이팅장 및 스키주로

■ 기타 (대내 정치)

- 노동당의 선군사상 독창성은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며 혁명군대의 주도적 역할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을 떠밀어내야 한다는 혁명이론을 밝힌데 있다"고 강조(11.24, 중통·평방·노동신문/우리 당의 선군사상이 밝힌 혁명이론의 독창성)
- 노동당의 선군혁명사상의 정치이론 독창성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신 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정치 실현을 담보하는 사상 정신적 요인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해명한데 있다"고 해설(11.28, 중통·노동신문/우리 당의 선군혁명 사상이 밝힌 정치이론의 독창성)
- 김정은 저작 발표('12.12.1) 1주년 기념 사회과학부문토론회, 11.28 진행 및 사회과학·교육·혁명사적·민족유산보호·출판보도부문 일꾼 등 참가(11.28, 중통·중방)
 - 김정은 저작 :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

나. 경제

- 北 국제전람사 사장 "기업소 무역자유 권한 확대"(12/1, 연합뉴스; 조국)
 - 북한이 기업소의 상품 수출 권한을 확대해 대외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조선국제전람사의 박응식 사장은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12월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최근 여러 단위에 무역의 폭을 넓히도록 권한을 주고 생산 단위들에서 수출기지를 잘 꾸려놓고 자기들의 생산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박힌.

■ 기타 (대내 경제)

- 【北, 올해 경제분야 성과 부각 선전 강화】

- 올해 평양시내(중구역·모란봉구역 등)의 "수십만 평방미터 도로 들 포장(피치·콘크리트)" 등 '도로 정비·개선성과' 선전(11.28, 평방)
- 전국적으로 "다시마 모내기 실적 70% 개선" 등 각지 수산부문 일꾼들의 '바다나물 증산 준비성과' 보도(11.28, 중방·노동신문)

다. 군사

● 北 항공절 맞아 '공군' 띄우기(1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두 번째 '항공절'을 맞아 공중을 책임지는 항공 및 반항공군을 내세우며 분위기를 띄우는 내용을 보도함.
- 신문은 2면에 게재한 '주체적인 항공 및 반항공군 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시며'란 제목의 기사에서 공군 무력을 발전시킨 김정일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찬양함.
- 더하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여러 차례나 항공 및 반항공군을 찾아 격려했다며 "원수님(김정은)의 믿음과 사랑은 우리 비행사(조종사)들이 영원히 김정은 결사옹위의 항로를 따라 위훈을 수놓을 수 있게 하는 근본 원천"이라고 강조함.

라. 사회·문화

● 北, 지방 잔디연구소 건설... "풍토 맞는 품종 개발"(11/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지난 6월 평양에 잔디연구센터를 새로 만든 데 이어 최근 동북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에 각각 잔디연구소를 건설하는 등 '잔디 심기'에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으며 "함경북도와 황해남도의 일꾼(간부)과 근로자들이 잔디연구소 건설을 빠른 속도로 내밀고 있다"고 25일 보도함.
- 신문은 이어 함경북도에서는 올해 안에 연구소 완공을 목표로 '충돌격전'을 벌이고 있으며 황해남도에서는 "해주 잔디연구소 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가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전함.

● 北, 과학기술혁신운동 독려... "모범칭호 받자"(1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1면에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자'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고 일꾼, 당원, 근로자들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함.
- 신문은 이 운동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모범기술혁신공장(직장, 작업반)칭호쟁취운동'을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이라고 설명하며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가 이 운동을



진행하고 당의 지도에 따라 추천과 판정, 심의, 평가사업을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기념우표 발행(1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개성 일대의 유적과 유물들의 사진을 담은 우표를 발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함.
 - 이번에 발행된 우표는 고려 성균관 대성전과 개성 남대문, 공민왕릉, 선죽교의 모습을 담은 묶음우표 4종과 두만강 물고기 화석 등 북한에서 발굴된 화석들을 담은 개별우표 3종으로 구성됨.

- **北방송 "마식령 스키장, 리프트 공사 한창"(11/2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건설 중인 마식령 스키장에서 현재 리프트 공사가 한창이라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전함.
 - 중앙방송은 "마식령 스키장 건설장에서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며 "스키장 건축물의 내외부 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나고 지대정리와 원림 형성이 진행되는 속에 스키장 운영을 위한 삭도(리프트)와 눈포시설(눈을 만들어 뿌리는 장비) 공사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밝힘.

- **北 농장서 인센티브...1인당 65kg 추가배급(11/29, 연합뉴스)**
 - 올해 가을 북한의 작황을 조사한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 대표단이 북한 협동농장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WFP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3년 북한 작황보고서'에서 "다수의 농장이 하위조직들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생산량이 계획을 초과하면 최대 3개월치 식량이 추가로 지급돼 1인당 65kg을 더 받는다"고 소개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신문 "美 '핵무기없는 세계' 구호는 기만"(11/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란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하루만인 25일 미국의 세계 비핵화 노력을 '기만'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핵무기 없는 세계 타령은 기만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계' 타령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핵만이 남아있는 세계이며 그것은 핵으로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욕을 충족시키려는 망상 속에 떠올린 나팔"이라고 밝힘.
 - 또한 "여러 핵보유국들의 출현으로 미국의 핵독점은 이미 전에 물거품



이 되고 말았다"며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한 것은 "여러 핵대국들의 핵무력 강화를 저지시키고 다른 나라들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해 기어코 세계 제패를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 **캐나다 NGO, 北에 콩우유 재료 100t 지원(11/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캐나다의 민간단체인 퍼스트스텝스가 이달 중 북한 고아원 어린이를 위해 콩 100t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함.
- 수잔 리치 퍼스트스텝스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단체 관계자 3명이 지난 달 강원도 원산과 남포시 등 지역을 방문해 고아원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와 식량 공급 상황을 파악했다며 이달 중에 콩우유 재료로 사용될 콩을 북한에 보낸다고 밝힘.

● **올들어 러시아 파견 北 숙련노동자 크게 늘어(11/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들어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숙련 노동자가 크게 늘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 RFA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州) 당국을 인용해 올해 1~9월 자격증을 갖춘 북한 숙련 노동자가 러시아 정부의 취업 허가를 받은 것은 모두 762건이었다고 전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8배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함.

● **스위스 NGO, 태양열 물가열기 대북지원(11/28, 자유아시아방송(RFA))**

- 스위스의 대북지원단체 아가페인터내셔널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해 고아원 어린이를 위한 태양열 물가열기를 전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전함.
- 아가페인터내셔널 측은 방북 기간 태양열 물가열기를 직접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평양의 기술자와 함께 함흥에 있는 고아원에 물가열기 설치 공사를 계획하고 왔다고 밝힘.

● **北, 김일성 베트남 방문 55년 맞아 친선관계 부각(1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김일성 주석의 베트남 방문 55주년을 맞아 베트남과 친선관계를 강조함.
- 신문은 '조선과 월남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위한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주석이 1958년 11월 28일 호찌민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사실을 상세히 소개함.
- 신문은 김 주석이 당시 특별비행기를 타고 하노이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베트남 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김 주석과 호찌민 주석이 바딩광장에서 나란히 한 군중연설 내용도 전함.



- **北방송, 中 센카쿠 포함 방공식별구역 설정 '두둔'(11/2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28일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보도함.
 - 방송은 이번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발에 대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의 부당한 입장을 단호히 배격했다"라며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일본은 "이러쿵 저러쿵할 권리가 없다"라는 중국측의 입장을 소개함.
- **북·중·러 두만강 하구 관광 협력사업 추진(11/29, 연합뉴스)**
 - 북한 나선특별시 관계자가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지린성 훈춘시, 러시아 연해주 관계자와 2차례 회의를 갖고 두만강 하구 국제관광코스 개발 문제를 논의했다고 29일 연변신문망 등 중국 매체들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함.
 - 두만강과 동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국경을 맞댄 이들 지방정부 관계자는 육로와 바닷길을 이용해 3국을 연결하는 육·해 환형(環形) 관광코스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박 운송과 운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짐.
- **北, 파나마에 청천강호 관련 벌금 일부 납부키로(11/29, AFP 통신)**
 - 북한이 불법 무기를 적재한 청천강호에 파나마 운하관리국이 부과한 벌금 100만달러 가운데 67만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함.
 - 청천강호 선원 변호인측은 북한 외교관들이 해당 벌금을 15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현지의 관리들과 합의함.
- **北, 억류 미국인 뉴먼 사죄문 공개... "죄과 인정"(종합2보)(11/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0일 억류중인 미국인 메릴 뉴먼씨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사죄문 전문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함.
 - 조선중앙통신은 발표한 보도에서 "최근 우리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서는 관광객으로 들어와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 공민 메릴 에드워드 뉴먼을 단속, 억류했다"며 "그의 대조선 적대행위는 여러 증거물에 의해 입증됐고, 그는 자기의 모든 죄과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했다"고 밝힘.

나. 6자회담(북핵)

- **北외무성 "美의 부당한 전제조건 용납 않을 것"(종합)(11/26, 연합뉴스)**
 - 북한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6자회담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 말을 인용해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데이비스 특별 대표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지만 미국이 고집하는 부당한 전제조건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지난 22일 방한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고 25일에는 일본에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11.26)】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발언(북의 태도변화 없이는 6자회담 재개 어렵다, 對北 압박 강화할 것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부당한 전제조건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11.26, 중통·중방)
-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바라지만 부당한 전제조건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적대시 책동이 날로 노골화되고 핵위협이 가증되는 한 우리는 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할 것임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여성근로단체도 "南여성, 반정부투쟁 나서야" 선동(1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여성 근로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중앙위원회는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담화에서 "지금 남조선에서는 악명높은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나 판을 치고 있다"라며 "괴뢰패당의 강권과 폭정에 맞서 남조선 여성들도 정의와 민주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과거에) 남조선 여성들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나섰기에 결국 서슬푸르던 '유신' 파쇼독재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라며 "'유신' 독재가 또다시 되살아나면 가정의 단란한 행복도, 자식들의 미래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함.
- 北, 南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비난(11/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남한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비난하며 인권유린의 '주범'이라고 주장함.



- 중앙통신은 '인권문제의 피고석에 앉아야 할 주범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남한으로 가려던 탈북자 13명이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공안에 체포된 사건을 거론하며 국가정보원이 북한 주민들을 남한으로 '유인납치'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신문 "새누리당 '北 투쟁지령' 주장은 궤변"(11/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북한의 대남투쟁 지령" 발언에 대해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이자 "북에 대한 악랄한 도발"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급소를 찢린 자들의 비명'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남조선에서 고조되는 반정부 투쟁은 보수집권세력이 저지른 최악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저들 때문에 빚어진 최악의 정치혼란과 통치위기를 마치 우리 때문에 조성된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최근 호소문을 통해 '남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민주화와 조국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동족으로서 외면할 수 없기에 응당 할 말을 하는 것"이라며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떠나 북남관계 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함.

● **北 농민단체 "남농민, 파쇼통치 끝장내야" 선동(12/1, 조선중앙통신)**

- 농민단체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하 농근맹)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가 '쌀 개방 반대'와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사실을 거론하며 "남조선 농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밝힘.
- 농근맹은 특히 "남조선 농민들은 반파쇼 민주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각계각층과 굳게 어깨걸고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 가증스러운 파쇼통치를 끝장내고 땅의 주인된 농민의 세상, 민주주의 새 사회, 자주통일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장웅 "남북협력 차질...北태권도 올림픽 참가 난항"(11/27, 미국의소리(VOA))**

- 북한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남한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의 태도 변화로 북한 태권도 선수의 올림픽 참가 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장 위원은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과 WTF가 북한 태권도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에 구두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WTF가 작성한 양해각서 초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고 VOA에 밝힘.



- **北조평통 "중북'은 위기 처한 南의 상투적 수법"(11/28,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들의 시국미사 발언을 둘러싼 '중북' 논란에 대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중북을 만병통치약처럼 써먹는 것은 괴뢰역적패당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비난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저들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였다"고 종교단체까지 중북의 감투를 씌우는 것은 괴뢰패당이 떠드는 중북이라는 것이 순전히 정치적 탄압을 위한 구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발해준다"라고 지적함.

- **남북,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공사 내주 시작(종합)**
 - 남북은 29일 개성공단의 일일단위 상시통행 실시를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를 다음 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남북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RFID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함.



■ 기타 (대남)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53호(11.24)】 우리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로 유엔의 '북인권 결의안' 채택 관련 "反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이며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11.24, 중통·중방)
- 北 「여맹」 대변인 담화(11.25), 現 남한 정치를 "유신 독재의 부활"이라며 '남한 여성들의 괴뢰패당의 강권과 폭정에 맞서 反정부 투쟁 적극 동참' 선동(11.25, 중통·중방·평방)
 - 現 정권에 대해 "유신 독재체제를 그대로 답습한 1인 통치체제를 수립하고 보안법을 휘두르며 인민들에 대한 파쇼폭압에 매달리고 있다"고 선동 지속(11.25, 중통·노동신문/파쇼폭압은 자멸의 길이다)
- 南北이 준수·이행해야 할 근본원칙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민족끼리 이념'이라고 주장하며 자주적 조국통일 실현을 위해 '외세 의존에 명줄을 건 사대매국노들을 단호히 제거해 버릴 것'을 주장(11.26, 중통·노동신문/우리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의 근본이념)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54호(11.28), 대통령·새누리당·언론 등 박창신 신부(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北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발언 비판에 대해 "중복몰이 광란"이라고 왜곡 주장 및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 천명(11.28, 중통·평방)
- 통일부 대변인 성명(11.22, 北의 대남 비방·중상과 반정부 선동 등 유감)에 대해 '남북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은 괴뢰들은 유감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책임 전가 비난(11.28, 평방/대결상태를 격화시키는 도발적 망동)
 - 대통령 시정연설 지속 거론 및 '경제문제는 자화자찬,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은 답변 회피, 對北 관련 발언은 北을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비난 선동(11.28, 평방/조롱거리로 된 시정연설)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데이비스 대표 "北변화없으면 압박 강화">(11/25, 교도통신)
 -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5일 도쿄에서 이하라 준이치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회담한 뒤 "만약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핵폐기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더 강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또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회담 재개시기에 대해서는 관계국 간에 차이가 있다"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 이어 "이란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회원국으로서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의 차이를 강조했다.

- <“북한 핵개발 기회비용 2020년까지 1천억弗 추정”>(11/27, 연합뉴스)
 -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북한 핵개발의 경제적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경제 개혁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비핵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대외무역 실적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개혁과 비핵화를 모두 추진하면 현재 한해 20억달러 규모인 남북간 무역은 오는 2020년에는 110억~160억달러까지, 현재 한해 60억달러 수준인 중국과의 무역규모는 16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결국 핵개발로 인한 남북·중북 무역의 기회비용을 합치면 오는 2020년까지 누적액수로는 1천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추정했다.
 - 그는 "작년 북한의 총 무역 규모가 100억달러에도 못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결과"이지만 "북한 지도부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IAEA 사무총장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한 듯">(11/29, 미국의소리)
 - 아미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비공개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북한 영변의 원자로 시설을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감시한 결과 재가동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 그러나 아미노 사무총장은 해당 지역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로



재가동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영변의 원자로 시설 재가동을 밝혔으며,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영변의 원자로 냉각시스템 배수관에서 온배수가 배출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재가동 가능성을 제기했고, 한국 국방부도 최근 영변 원자로가 다시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북한 동해 무수단리 발사장 공사 재개”<38노스>>(11/30, 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이 지역을 찍은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더 큰 규모의 로켓을 쏠 수 있는 발사대 등의 설치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시험 발사로 은하 로켓보다 더 큰 로켓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 노후한 동해발사장을 폐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음.
- 38노스는 공사가 재개된 동해발사장의 발사통제센터는 겉으로 보기에 거의 완공 단계이고 로켓 조립동은 아직 건설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 또 새 발사대나 이들 시설을 지원할 도로의 경우 공사 흔적이 아직 없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아울러 북한이 동해발사장 등에서 연대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 장거리 로켓을 추가 시험 발사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다.

나. 미·북 관계

● <北외무성 “美의 부당한 전제조건 용납 않을 것”>(11/26,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지만 미국이 고집하는 부당한 전제조건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지난 22일 방한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고, 25일에는 일본에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바 있음.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애당초 6자 회담 재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다시 드러났다”며, 전제조건을 내거는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모든 후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 중·북 관계

● <北방송, 中 센카쿠 포함 방공식별구역 설정 ‘두둔’>(11/28, 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28일 중국이 센카쿠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를 내보냈음.



- 방송은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센카쿠 열도 정세와 관련, "전적으로 일본 측의 그릇된 행위로 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미국 측은 조어도주권 문제와 관련해서 부당한 발언을 더 이상 하지 말며 일본의 모험성을 조장시킬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 방송은 그러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됐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반발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음.

라. 기 타

● <미 의회 보고서 '중국 관심사, 한·미 영향력 38선 이남 묶어두기'(11/29, 미국의소리)>

-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펴낸 '미중 군사협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에서 북한 정권의 안정을 위해 안보와 생존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음.
- 보고서는 이어 북한 정권의 위기나 붕괴 상황 발생시 중국과 미국, 동맹국들의 대응 계획 등을 어떤식으로 논의할지도 미중 군사협력 관계에 새로운 과제라고 전했다.
- 또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 기밀 정보를 공유할 의사가 있는지 등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 특히 미중 두 나라의 군사협력은 매우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 중국이 해상 영역에서 적극성과 공격성을 보이고 핵무기나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것도 양국 간의 군사협력이 제한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 中'방공구역 선포'로 신형대국관계 부담 인식"(11/27, 연합뉴스)>

-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중국이 지난 23일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발표한 직후 미국 측 당국자들과 잇따라 비공식 협의를 갖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 이 자리에서 미국 측 당국자들은 중국의 발표를 '일방적 조치'로 규정된 뒤 중국과 이른바 '신형 대국관계'를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이번 발표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를 표시했다고 함.
- 또한 중국의 조치는 미국이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행위의 자유' 원칙도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국, 美이란제재법 적용 예외 180일 재연장>(11/30,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9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을 내달 2일부터 18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물량을 크게 줄인 중국, 인도, 한국, 터키, 대만 등이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의 적용 예외 자격을 다시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은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해야 할지, 아니면 제네바 합의에 따른 이란 제재 완화로 수입 규모를 동결 또는 확대할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음.

나. 한·중 관계

- <정부 "中 일방적 방공구역 불인정"…공식 통보>(11/25, 연합뉴스)
 - 정부는 25일 주한 중국대사관의 쉬징밍 무관(육군 소장)을 국방부로 불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할권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음.
 - 류 실장은 28일 개최되는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쉬징밍 소장은 "논의할 수 있도록 본국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방침은 현재로서는 중국에 통보하지 않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서 우리 항공기를 통과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음.
- <中군부, 방공구역 강경 태세…"황해·남해에도 설정">(11/27, 연합뉴스)
 -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이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서해 지역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신호'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어 관련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임.
 - 서해는 남북의 군사적 대치지역인데다 한국의 군사훈련도 자주 실시되는 지역이어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서해까지 확대할 경우 한중 간 외교적 난제가 될 수 있음.
 - 중국 국방부는 이미 지난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했다고 선포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방공식별구역을 다른 지역에도 설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친강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적절한 시기에 다른 공역에 대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당국의 입장을 재확인했음.
 - 이런 가운데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6일 방공식별구역 설정 논란과 관련, "어떤 국가도 중국이 자기의 핵심이익과 정당한 권익을 포기할 것



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정부 "이어도는 영토 아니다...경제 수역 문제">(11/27, 연합뉴스)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가 아니다"면서 "이어도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며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인 경제수역 문제"라고 밝혔다.
 - 대변인은 "우리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 방향과 관련,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다만 대응 과정에서 일본이나 대만과 협력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 <정부, KADIZ 남쪽으로 확대 가다...이어도 포함 염두>(11/28, 연합뉴스)
 -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8일 방공식별구 관련 협의회를 갖고 "그동안 KADIZ와 관련해 북쪽에 주로 관심을 두다 보니 남쪽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면서 "남쪽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의 확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다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이날 열린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에 대한 우리 측의 방공식별구역(CADIZ) 조정 요구를 중국 측이 거부한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관측됨.
 - 한편, 우리는 정부는 수중 암초인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1969년 일본에 이어 중국 측이 최근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킨 것과는 달리 KADIZ에는 이어도가 빠져 있음.

다. 한·일 관계

- <아베 총리 "韓日관계 일조일석에 실현된 것 아니다">(11/29,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9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현재의 한일 관계는 일조일석에 실현된 것이 아니라 곤란한 문제가 생겨도 장기간에 걸쳐 의사소통에 힘쓴 양국 관계자의 노력 위에서 구축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아베 총리는 "연간 55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양국을 왕래하고 경제 분야의 협력도 놀라울 정도로 전개하고 있다"며 "양국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오는 2015년 한국과 일본의 수교 50주년에 언급, "역사적인 시점을 양국 국민과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관계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을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쌍방의 노력을 당부했음.

라. 미·중 관계

- <美, 중국 방공구역 '무시'...B-52 폭격기 훈련비행>(11/27, 연합뉴스)
 - 미국의 B-52 폭격기 두 대가 지난 25일 오후 7시(현지시간) 괌에서 이륙해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상공을 비무장 상태로 비행했음.
 - 이는 미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무시 전략'으로 해석돼 이 지역에서의 군사·외교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임.
 - 미 국방부의 스티븐 워턴 대령은 26일 이번 비행은 정규 '코럴 라이트닝' 훈련의 하나로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중국 측에 사전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고 '사고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강조, 중국의 별도 대응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 한편, 27일 중국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미 항공기의 전 과정을 감시했고 즉각 식별했다"며 "중국은 관련 공역에 유효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음.

마. 미·일 관계

- <美, 日 집단자위권 '옹호론' 민간으로 급속 확산>(11/24, 연합뉴스)
 -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미국 내 '옹호론'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음.
 -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AC), 전략문제연구소(CSIS), 헤리티지 재단 등은 최근 잇따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확보에 대해 이는 지역 내 안보에 기여하며, 중국을 봉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등의 긍정적인 시각을 밝혔음.
 - 특히 이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태지역 동맹 무계추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최근의 우려와 맞물려 우리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미·일, 동중국해 정찰 강화...글로벌호크 투입>(11/26, 연합뉴스)
 - 니혼게이지이신문은 중국이 센카쿠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 미국과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 상공에서의 감시·정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현재 활동 중인 자위대의 조기경보기(E2C)에 더해 미군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등을 동중국해 상공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라고 함.
 - 신문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미일 양국이 공동 대응하는 태세를 보여줌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음.



- <미·일 방위협력, 대규모 재해 발생시도 확대 적용>(11/28,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은 미국과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일본 자위대·정부 관계 부처와 미군·주일 미국대사관이 참여하는 회의의 자동 가동 방안에 대한 조정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음.
 - 내년 말까지 완료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 유사사태 발생시로 국한돼있는 미일 방위협력을 동일본 대재해 발생시로도 확대한다는 구상임.
 -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무력공격과 주변유사 사태 시, 미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회의체인 '조정메커니즘'(BCM)을 두고 있는데, 미일 정부는 이 회의체를 재해파견 등에도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日 "美, 중국방공구역 비행 전 일본엔 통보">(11/28, 교도통신)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군 B-52 전략폭격기 2대가 최근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서 훈련비행을 실시하기 앞서 비행 계획에 대해 미국에게 "상당히 이른 단계에 연락이 있었다"고 밝혔음.
 - 이는 결국 '센카쿠는 중국 영토'라는 입장을 토대로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무력시위를 통해 밝힌 것으로 풀이됐음.
 - 미국은 센카쿠 영유권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센카쿠가 일본의 시정권 아래 있으며,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입장임.

- <방공구역 갈등 속 美日오키나와 해상훈련 현장공개>(11/28, 연합뉴스)
 - 교도통신과 NHK등 일본 언론은 미국 해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일본 오키나와현 남쪽의 서태평양에서 벌인 훈련 현장을 보도했음.
 - 미일 양국은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시행된 이번 훈련을 위해 양국 해군 함정 20여 척과 군용 항공기 수십 대를 오키나와 근해에 집결해 적군과 아군으로 역할을 나눠 잠수함 대응 전투 등 해상 작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벌였음.
 - 양국은 매년 반복되는 이번 훈련이 특정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이례적인 이번 훈련현장 공개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등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바. 중·일 관계

- <日 "영해·영공 결연히 방위"...중국대사 불러 항의>(11/25,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으며,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연대해서 중국에 자제하라고 강력히 요구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은 한중일 3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반응을 확대해 해석하지 말라고 당부했음.
 - 한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청용화 주일 중국대사를 외



무성으로 불러 강력하게 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철회를 요구했으나, 청 대사는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일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했음.

- 이어 26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일본에 대해 효력이 없다"면서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일본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중국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음.

● <日, 방공식별구역 태평양 오가사와라까지 확대 검토>(11/27, 연합뉴스)

- 오미우리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범위를 태평양의 오가사와라 제도까지 확대하는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일본은 오가사와라 상공이 타국 항공기에 의한 영공 침범 우려가 적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계기로 정부·여당 내에 방공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 방위성은 오가사와라 주변 자위대 기지에 긴급발진을 위한 전투기 부대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방공구역 확대 시기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함.
-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26일 밤 전화 회담을 갖고 중국의 방공구역 설정에 미·일이 협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으며, 케리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함.

● <中 방공식별구역의 제1목표는 일본<환구시보>>(11/29, 연합뉴스)

-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본이라고 확인하면서 일본이 이를 거부하면 '지체없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음.
- 하지만 환구시보는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군용기를 띄운 미국과 한국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만일 미국이 너무 멀리 나가지 않으면, 중국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지키려고 미국을 목표물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현재 할 일은 일본의 도발적인 행위들에 대해 확고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음.

● <中, 방공구역 철회 요구에 "일이 먼저">(11/28, 연합뉴스)

- 28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철회 요구에 양위권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권리가 없다"면서 중국 정부는 "일본이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국신문망은 양 대변인이 일본은 1969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공포했다고 설명하면서 "만약 방공식별구역을 철회하고 싶으면 일본이 먼저



철회하라"며 "그러면 중국은 44년 이후에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앞서 일본 자민당은 이날 결의안을 채택,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아태지역,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동중국해 주변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것이라고 밝혔다.

● <中, 방공구역 설정이후 첫 긴급발진...대화도 제외>(11/30,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대변인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미군 초계기 P3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E767 등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공군기가 29일 오전 긴급 발진했다고 밝혔다.
- 중국군이 지난 23일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이후 외국 항공기에 대해 긴급발진을 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중국은 이런 '군사 시위'를 벌이면서도 29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는 양측 간 소통을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며 대화를 촉구했음.

사. 기 타

● <美 아시아담당보좌관 "美입장서 한일갈등은 가족싸움">(11/24, 연합뉴스)

- 에반 메데이로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4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백악관 내 인터뷰에서 "한일 간의 긴장이 커지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가족이 싸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메데이로스 보좌관은 양국의 갈등이 "국민감정에 관한 미묘한 문제지만 외교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며 "미국이 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음.
- 한편, 그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에 관해서 "현 시점에서 어느 국가를 방문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미국 "TPP협상 상당한 진전...핵심 이슈 합의">(11/26, 연합뉴스)

- 25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을 비롯한 12개국 TPP 협상 대표들은 지난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회의에서 상당수 핵심 현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전했다.
-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TPP 협상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며 다음 달 7~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 워싱턴DC의 한 소식통은 "일본의 협상 참가 이후 역내 무역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도 TPP에 참가할 가능성이 큰 상태"라면서 "그러나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를 전후로 협상 참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음.

● <대만 "中 방공식별구 대응 미·일과 공조">(11/26, 연합뉴스)

- 영자지 차이나포스트 등은 린융러 대만 외교부장은 25일 입법원(국회)에서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 일본 등과 공조해 대응할 것이며 당국 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과 이미 접촉을 진행하고 있음을 전했다.
- 대 중국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가 포함된 것에 대해 "대만이 다오위다오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중국은 중화민국의 존재 사실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위원회는 지난해 8월 마잉주 대만 총통이 주창한 '동중국해 평화선언'에 기초해 이번 갈등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음.

● <中항모, 남중국해 장거리 선단 훈련>(11/26, 연합뉴스)

- 중국해군망은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26일 구축함, 미사일 호위함 등과 함께 선단을 이룬 채 북해함대 관할 구역을 넘어 남중국해로 사상 첫 훈련을 떠났다고 전했다.
- 항모는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보급함 등과 선단을 이뤄 움직여야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바, 랴오닝호가 선단 훈련에 나섰다다는 것은 본격적인 전력화를 위한 항모선단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는 의미임.
- 아울러 그간 주로 보하이만과 서해에서 훈련했던 랴오닝호가 이번에 남중국해를 훈련 무대로 잡았다는 점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日 동중국해 중간선 수호 나서나>(11/27, 연합뉴스)

- 중국 환구시보는 27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후인 지난 25~26일 이틀간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을 가르는 중간선인 동경 125도 30분 동쪽지역에 일본 정찰기와 군함, 해상보안청 소속 대형 순시선, 어선들이 집결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후 공세강화에 맞서 이 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선단을 꾸린 채 남중국해로 훈련을 떠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 호가 중간선을 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랴오닝 호는 일본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26일 센카쿠 주변해역 대신 대만과 중국 사이의 대만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일본판 NSC법안 의회통과…내달 4일 발족>(11/27,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 법안이 27일 성립됐으며,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판 NSC는 내달 4일 발족할 예정임을 보도했음.
 - 이날 성립된 법안에 따르면, 이 기구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관리,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으며, 의장은 총리인바 정책 결정을 둘러싼 총리 관직의 주도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한편, 아베 정권은 특정비밀보호법안과 NSC법안을 한 묶음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를 두고 일부 일본 매체들은 아베정권의 '전후체제 탈피 프로젝트' 첫 과업으로 평가하고 있음.

- <남중국해에 미·중·일 대형 함정 집결>(11/29, 연합뉴스)
 - 환구시보는 28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북아 안보지형이 복잡해진 가운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항공모함 및 준항모급 함정 4척이 남중국해에 집결했다고 보도했음.
 - 미국과 일본은 이미 랴오닝호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나섰으며, 미국은 랴오닝호가 대만 해협을 지난 이후 대만, 일본 등과 협력해 추적 감시와 정보 수집을 실시했다고 함.
 - 랴오닝호는 대만 해협을 빠져나온 즉시 훈련을 시행했으며, 미군기 등의 추적과 감시 아래 훈련이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실전훈련과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중국 군부 인사가 환구시보에 밝혔음.
 - 3개국 대형 함정들이 남중국해에 모인 것은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둘러싸고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군사적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커진데 따른 것으로 보임.

- <‘방공구역’ 갈등고조…韓美日 “무시” vs 中“기정사실”>(11/29, 미국의소리)
 - 28일 미국에 이어 한국과 일본도 지난 23일 이후 각각 사전 통보 없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안에 항공기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음.
 - 지난 23일 중국이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통과시 사전 통보를 요구한 데 대해 한미일 세 나라가 모두 불응한 바, 세 나라가 긴밀히 대응의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중국의 사전 통보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방공식별구역 무력화에 공동으로 나선 모양새임.
 - 현재까지 중국은 한미일 3국 항공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때 강경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나, 일단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별한 태도 변화는 없었음.
 -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내달 2일부터 한중일 세 나라를 순방할 예정이어서 다음 주가 이번 사태의 향배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됨.



- < TPP 관심 표명... "참여 미루면 일본에 밀린다" > (11/30, 연합뉴스)
 - 정부가 29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면서 우리나라의 협상 참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일단 관심 표명을 한 뒤 협상 가입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가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TPP 협상에 대한 정부의 관심 표명 배경에는 일본의 참여, 그리고 기존 참여국 간 협상 가속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고 전해짐.
 - 그러나 정부의 설명대로 관심 표명이 곧 협상 참여를 뜻하지는 않으며, 향후 TPP 12개 회원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가입 조건을 협의해 실제 TPP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억류 미국인 뉴먼 가족, 북한에 석방 호소(미국의 소리, 11.25)**
 - 지난 달 북한에 의해 억류된 미국인 관광객 뉴먼 씨의 부인이 남편의 석방을 북한 당국에 호소
 - 리 뉴먼 씨는 특히 심장병을 앓고 있는 남편의 건강을 우려하면서, 남편이 평양의 스웨덴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약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 미국 언론들은 85살의 6.25 참전용사 출신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된 데 큰 관심을 보이면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체포 이유가 어떻든 그동안 관광 사업을 확대하려던 북한 정권의 계획이 이번 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

- **"러 파견 북 숙련 노동자 늘어"(자유아시아방송, 11.25)**
 - 올해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 중 숙련된 기술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
 -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단순 노무직 위주에서 숙련 기술자까지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이 다변화하는 징후로 볼 수 있어 주목
 - 올해 3/4분기(9월)까지 러시아 이민국이 북한 국적의 노동자들에게 발급한 러시아 내 취업을 위한 노동 허가서는 모두 2만1천700건으로, 이중 728건이 자격증 등을 가진 숙련 노동자에게 발급되었으며, 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고숙련 노동자에게 발급된 취업 허가서는 34건
 - 이 같은 수치는 25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가 연방 이민국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현황에 따른 것
 - 아무르주에 따르면, 이같은 762명에 이르는 숙련된 북한 노동자 수는 지난 해에 비해 3배 가까이(2.8배) 늘어난 수치
 - 아직 러시아 내 전체 북한 노동자 수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단순 노무자 일색에서 벗어나 점차 기술자 파견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주목
 - 더욱이 올해 러시아에 파견된 전체 북한 노동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2.2%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숙련 노동자 증가세는 더욱 눈에 띄임.

- **북 당국, 돈 받고 식량배급(자유아시아방송, 11.26)**
 -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식량배급을 하면서 배급 대상에 따라 장마당 가격에 버금가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중국을 방문 중인 함경북도 주민 소식통은 "직장에 다니는 세대주가 있는 가정에서 세대주본인분의 배급식량은 무료로 가까운 아주 높은 국정 가격으로 배급을 하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는 나머지 부양가족분의 식량은 장마당 가격의 80%가 넘는 가격을 징수하며 배급을 하고 있다"고 언급
 - 소식통은 이어서 "부양가족 몫을 수령하고 싶지 않아도 이를 받지 않으면 무료로 가까운 세대주 몫도 주지 않기 때문에 끼워팔기에 가까운 부양가족의 배급까지 억지로 수령한다"고 설명
 - 평양 출신 탈북자 이모 씨는 2002년 7.1 경제조치를 분기점으로 그 이전까지는 부양가족분의 배급식량도 국정 가격의 아주 높은 값으로 배급을 실시했으나 부양가족 몫의 배급식량은 값이 점점 올라 장마당 가격에 근접하게 되었다고 지적
 - 이런 이유로 해서 최근에는 형편이 좀 나은 주민들 중에는 배급식량 수령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지는 형편
 -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북한당국이 배급이라는 말에는 어울리지 않게 질 나쁜 양곡을 주민들을 상대로 강제 판매하고 있다는 비판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지적
- **북, 현실풍자 우스갯말 대유행(자유아시아방송, 11.26)**
- 북한의 압담한 현실을 풍자하는 우스갯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는데 최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간부들을 빗대어 조롱하는 우스갯말들이 새롭게 유행
 - 최근에는 김정은 정권과 간부들을 비난하는 새로운 우스갯말들이 만들어져 크게 유행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
 - 평양시를 비롯해 많은 주민들과 대학생들속에서 "'지도원'이 돼야 살 수 있다, '지배인'이 되면 살기 어렵다"는 우스갯말이 유행
 - '지도원은 '지위가 있어도 '도'독질을 잘 해야 돈(원)을 벌수 있다는 뜻으로 양심적으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북한 간부계의 현실을 비판했으며, '지배인'은 '지위가 있고 '배운 것이 있어도 '인'정에 사로잡히면 간부자리를 지켜낼 수 없다는 의미
 - 함경북도의 소식통도 "'마식령속도가 창조된다는 '마식령'은 바라만 봐도 탄식이 절로 난다는 의미에서 '탄식령'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며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을 뜻하는 '공동변소'를 '간부사택'이란 은어로 부르고 있다"고 지적
 - 또 "김정은을 '장군님'이라 부르지 않고 그 아내의 이름을 따 '설주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며 "이런 우스갯말들을 다 알게 되면 이곳(북한)의 민심이 어떤지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정부, 귀환 의사 밝힌 北주민 판문점 통해 송환(데일리NK, 11.26)**
- 통일부가 26일 북한 주민 1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인계



- 지난 22일 미국 2사단 소속 헬기가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목선을 발견해 구조작업을 펼쳐 그중 1명을 구조해 우리 측에 인계했으며, 당시 목선 탑승자 3명 중 2명은 사망한 상태
 - 우리 측은 구조된 북한주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관련 조사를 진행
- **北, 南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비난(연합뉴스, 11.28)**
 - 북한은 28일 남한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비난하며 인권유린의 '주범'이라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인권문제의 피고석에 앉아야 할 주범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남한으로 가려던 탈북자 13명이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공안에 체포된 사건을 거론하며 국가정보원이 북한 주민들을 남한으로 '유인납치'하고 있다고 비난
 - 또 남한 내부적으로는 '유신 파쇼독재의 부활'로 "자주를 지향하고 통일을 요구하는 진보적 단체들과 인사들은 물론 무고한 인민들까지 자기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고 덧붙임.
 - 중앙통신은 남한이 북한의 인권을 문제 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미국에 추종해 인권문제를 동족대결, 체제대결의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려고 날뛰는 행위야말로 만사람의 조소를 자아내는 추태"라고 주장
- **탈북자 단체 "北, 내년 10월 인터넷 부분 개방"(KBS, 11.28)**
 - 북한이 내년 10월쯤 인터넷을 북한 주민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할 것이라는 증언이 제기
 -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북한 인터넷 회사 관계자의 말을 근거로 "북한이 2011년부터 3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일반인에게 인터넷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려 하는데 일종의 '인트라넷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
 - 이 단체는 "북한이 인터넷에서 한국 사이트와 김정은 제1위원장 비판 사이트는 차단하고 과학, 기술 자료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인터넷 '저수지'를 만든 뒤 개방할 예정"이라고 설명
- **유엔 '북한 올 식량 생산 5% 늘어...3년째 증가'(미국의 소리, 11.29)**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11일까지 북한에서 실시한 올해 수확량 조사 결과를 발표
 - 두 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도정하기 전을 기준으로 5백98만 t으로, 지난해에 비해 5%가 증가
 - 북한의 수확량은 지난 2011년 8.5%와 2012년 6%에 이어 올해로 3년 연속
 - 보고서를 작성한 FAO의 키산 군잘 박사는 올해는 특히 심각한 자연재해가 없었고 날씨가 좋아 수확이 늘었다고 설명
 - 보고서는 올 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한 달 빠른 7월에 발생해 벼가 심어



진 논에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올해 쌀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8% 늘어 290만1천t이나, 강냉이(옥수수)와 콩은 비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2%와 6% 감소

- 보고서는 많은 농장들이 성과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생산량을 초과 달성한 하위조직들은 최대 3개월 치 식량을 추가로 지급받아 1인당 65kg을 더 받으나, 계획된 생산량에 미달한 조직은 4개월치 식량을 못 받게 된다고 설명

● 유엔 '올해 북한 가구 75% 영양 부족 겪어'(미국의 소리, 11.30)

- 유엔이 지난 28일 발표한 '작황과 식량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서는 전체 가구의 75%가 영양 부족을 겪었으며, 올해 수확량이 다소 늘었지만 개별 가구의 식량 소비는 양과 질 모두 부족한 실정
- 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북한에서 직접 식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와 WFP가 올 한 해 동안 조사한 결과를 종합한 것
- 조사 가정의 30%는 다량영양소와 미량영양소 섭취가 모두 부족했고, 45%는 이 중 일부 영양소 섭취가 미흡
- 공공배급제에 의존하는 가정은 올해 평균 한 사람 당 하루 310g의 곡물을 섭취했고, 협동농장 구성원은 400g을 섭취했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해 올해 북한 주민 1 명이 섭취한 곡물은 하루 평균 350g으로 국제사회의 하루 영양섭취 권장량인 2천1백kcal에 30% 못 미치는 양
- 유엔은 북한 주민들이 8개의 식품군 중 3개에서 4개의 식품군 밖에 섭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콩이 주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지난 몇 년간 콩 재배가 줄어 주민들의 섭취량도 같이 줄고 있다고 지적
- 또한 유엔은 북한 당국의 공공배급제가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해 배급을 받는 가정의 80% 이상은 식량 부족에 대해 자주 걱정하고, 한정된 식품군만 섭취하며,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설명

● "北 내각·보안부 고위 간부, 南영상 시청해 총살"(데일리NK, 11.28)

- 최근 북한에서 한국 동영상 및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내각과 시(市) 인민보안서장 등 고위 간부들이 총살당한 것으로 전해짐.
- 외부에서 유입된 외부 영상물이 북한 내부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 주민뿐 아니라 고위 간부들도 처형당하고 있어 공포정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옴.
- 평양 소식통은 28일 "10월 말 평양 김일성정치대학에서 내각 연유(燃由) 국장, 남포(직할)시·순천시 인민보안서장 등 간부 8명이 총살당했다"면서 "이들은 남한 TV 프로그램과 여자 알몸이 나오는 알판(씨디)을 보다가 꼬리가 밟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 소식통은 정치대학에서 총살을 진행한 이유는 일반 주민들에게 간부들



을 총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미래의 정치 간부들에게 '체제 반발에 대한 처벌'을 보여주기 위한 '시범깸(본보기)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

- 최근 보위부에서 직접 임의 시간에 주민들 살림집을 덮쳐 알판 및 메모리 수색, 불법 영상물 소지 여부에 대한 정밀 수색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수사팀에서는 다년간 핸드폰 전파탐지를 하면서 훈련된 기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위부 27국'이 중심역할을 담당
- 소식통은 이들이 단속하고도 뒷돈(뇌물)로 자기 잇속을 채웠던 109 상무와는 다르게 조금만 걸리면 바로 체포해 가는 등 공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양에서 추방하고, 지방에서는 교화소로 보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고위 간부들까지 총살당했다는 입소문까지 겹쳐 주민들은 이웃집에 발길을 끄는 등 행동거지에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피바다'가 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

2. 북한인권

- "北 수용소 폭격해 무너지면 몇명은 자유라도 얻겠죠"(조선일보, 11.25)
 -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23일(현지시각) 학생 동아리 '북한인권모임' 주최로 '북한 인권, 가망 없냐'를 주제로 한 콘퍼런스 개최
 - 콘퍼런스에는 미 동부 15개 명문대학 북한 인권 동아리 회원 220여명이 참석했으며,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탈출한 북한 인권운동가 신동혁(사진)씨의 질의응답에 큰 관심
 - 이날 콘퍼런스엔 데이비드 호크 전 미국 국제사면위원회 국장과 루마니아 출신 그래픽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강연
 - 행사를 기획한 반휘민(프린스턴대 경제학 4)씨는 "각 학교 학생 동아리의 개별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어 북한 인권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콘퍼런스를 준비했다"고 설명
- 남아공 외교부장관,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확인 요청(미국의 소리, 11.27)
 - 이브라힘 이브라힘 남아프리카공화국 외교부 부장관이 26일 남아공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 매버릭'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초 방북 중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는 뜻을 밝힘.
 - 이런 발언은 이브라힘 부장관은 북한과 남아공 수교 15주년을 맞아 성사된 방북을 두고 남아공 일각에서 이브라힘 부장관의 방북 목적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언급
 - 이브라힘 부장관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김형준 외무성



- 부상과 회담하고 박의춘 외무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
- 또한 북한 당국자를 만나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해 많은 부정적 여론이 있는 점을 지적하고, 남아공이 이를 도울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
 - 남아공 정부는 강제수용소의 존재 여부 등 인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남아공의 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북한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
 - 이브라힘 부장관의 방북에 앞서 '데일리 매버릭' 등 일부 남아공 언론들과 인권단체들은 그가 평양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브라힘 부장관의 북한 인권 발언은 이런 비판적 여론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됨.
 - 이브라힘 부장관은 자신의 인권개선에 관한 협력 제안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허용 제안에 대해 북한 측은 아무런 답변없이 메모만 했다고 설명
- 유엔 北인권조사위, 2014년 3월 문 닫을 듯(동아일보, 11.29)
-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내년 3월 보고서 제출 이후 연장되지 않고 해체될 것으로 보임.
 -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COI의 고위 실무 관계자를 만나고 돌아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COI의 실무자들이 '올 3월 1년 기한으로 설립된 COI가 내년 3월 이후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북한인권 사랑방 모임'에서 밝힘.
 - 제네바에서 김 변호사를 만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의 줄리 드 리베로 제네바국장 등도 이 같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짐.
 - 유엔 측은 한반도가 현재 시리아처럼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분쟁(conflict)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임.
 - 김 변호사는 "미국 호주 등 우방 국가들도 예산 문제 때문에 COI 활동 연장에 대해 소극적이고 내년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 쿠바 러시아 등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임되는 것도 부담되는 것 같다"라고 분석
 - 이날 모임에 참석한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등은 "COI가 사라진다면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기록 및 보존하는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3. 탈북자

- '중국서 암약하다 위장 귀순' 여간첩 징역 5년 확정(연합뉴스, 11.25)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가 탈북자



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여간첩 이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중국 심양, 청도, 북경에서의 공작활동으로 인한 국보법 위반의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
- 1996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 선발된 이씨는 2001년 중국으로 넘어가 외화벌이와 재미교포 유인 등의 공작활동을 하다 2011년 태국을 통해 귀순했으며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위장 탈북이 적발됐고 간첩 행위를 자백해 기소
-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와 회유로 사건을 조작했고, 허위 자백과 달리 자신은 순수 북한이탈주민이라며 무죄를 주장
- 이씨는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항소심 재판 도중 정신감정까지 받았지만 정신장애 진단이 나오지는 않음.
- 1·2심은 이씨의 공작활동 등은 유죄로, 위장 귀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

● 외교부 탈북민 안전소홀로 5년간 4명 숨져(한겨레, 11.25)

- 최근 5년간 우리 재외 공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사망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부는 제3국 체류 탈북민의 한국 이송률 목표치를 100%가 아닌 80%로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24일 외교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이후 재외 공관에 도움을 요청한 탈북민 가운데 사망한 사람이 4명
- 또한 연도별로는 2009년 3명, 2013년 1명으로,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이동 중 교통사고'로 숨졌고, 다른 2명은 '공관이 운영하는 안가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
- 공관 내 사고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2009년 안가에서 살던 한 탈북자가 5층에서 실족사했고, 같은 해 한 탈북민이 안가 밖에서 담을 넘어 들어가다 폐우물에 추락해 사망했다"고 설명
- 이들 외에 북한 국경을 넘는 과정이나 우리 재외 공관에 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탈북민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탈북자 관련 단체는 물론 정부조차도 구체적인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외교부는 2010년부터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이란 이름으로, 연간 예산 40여억 원을 들여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민을 국내로 이송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국내 이송 성공률 목표치를 80%로 잡고 있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박주선 의원은 "현재 외교부는 탈북민의 80%만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하면 된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100%를 데려오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이송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 이에 대해 외교부는 "탈북민 가운데 중국인 등이 섞여 있고, 또 (탈북 이후) 해를 넘겨 보호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이송률 목표치를 100%로 높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
- 한편, 재외공관에서 생활하는 탈북민의 민원 사안 내역도 확인됐는데, 외교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탈북민 민원 168건을 보면, 가장 많은 47건이 전화 요청 등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36건은 남한으로 빨리 보내달라는 것

● **탈북 남성이 재입북해 재혼한 아내를 만난다면…(연합뉴스, 11.27)**

- 북한에 아내를 남겨두고 탈북한 남성 A씨는 우여곡절 끝에 5년이 지나 재입북했으나 아내는 재혼한 상태였을 때, 아내와 재결합을 원하는 A씨는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최신호(2013년3호)에 따르면 A씨가 아내와 다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
- 학보에 실린 '소재불명자와 사망자 인증제도'라는 제목의 논문은 오랜 기간 행방이 묘연한 주민을 소재불명자(실종자)나 사망자로 인증하는 절차와 이들의 재산과 가족에게 적용되는 법규를 구체적으로 소개
- 북한에서 탈북자는 대부분 소재불명자나 사망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법규는 탈북자와 그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주민이 '사는 곳이나 거주지를 벗어나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가 3년을 넘어서면 가족이나 채권·채무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받아 그를 소재불명자로 인정하며, 5년 이상 소식이 끊겼거나 소재불명자로 인정된 후에도 2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면 사망자로 인정
- 사망자의 경우 재산은 가족 등에게 상속되며 결혼을 포함한 가족관계도 종결되기 때문에 소재불명자가 다시 나타나면 과거 재산·가족관계를 쉽게 회복할 수 있지만 사망자로 인정된 주민이 살아 돌아올 때 문제가 복잡해짐.
- 실제로 탈북자가 단신으로 북한을 빠져나온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이런 현실을 감안한 듯 북한은 사망 인정자의 가족이 재혼이나 입양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면 사망 인정자가 뒤늦게 살아 돌아와도 과거의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

● **말뿐인 탈북자 지원 경기도정규직 겨우 한명(31개 시·군 공무원 포함) (경인일보, 11.29)**

-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전국 최다 거주지인 경기도가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가며 각종 지원에 나서면서 정작 도내 탈북민들의 취업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정부가 이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권고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도 도



- 와 도내 시·군들 모두 아예 외면하거나 대부분 계약직에 그쳐 형식적 지원이라는 지적
-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거주 탈북민은 6천626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했으며, 이는 최근 5년 사이 3천여 명이 늘어난 숫자
 -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탈북민이 경기도에 거주
 - 도는 탈북민의 안정적 직업 선택과 도내 정착을 돕는다며 취업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도내 전체 탈북민 중 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단 6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 그나마도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 지속적 근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도는 전체 탈북민들의 취업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 예산지원도 미흡한 상태로, 지난해 탈북민 정착지원사업에 국비는 11억 3천만 원에서 1억여 원이 늘어났지만, 도비는 재정난 등의 이유로 지난해 5억5천만 원에서 오히려 1억여 원이 삭감
 - 탈북민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채용도 '생색내기' 수준이다. 안전행정부가 신규채용인원의 1%를 탈북민으로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도에는 현재 7명의 탈북민이 채용돼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정규직은 단 한 명뿐
 - 도 관계자는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탈북자, 현대중서 전문기술교육 받는다(뉴시스, 11.30)

- 북한이탈주민이 전문기술직 취업을 위해 현대중공업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
-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박기정)는 탈북자의 전문기술직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원장 유태근)과 협력해 탈북한 이들 중 청년층의 기술연수생 입교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힘.
- 앞서 이북5도위원회는 지난 10월 탈북자 1명을 기계 직종 기술연수생으로 현대중공업에 시범 추천했으며, 교육원은 서류 및 면접 전형 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해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연수교육을 실시기로 결정
- 교육이 끝나면 현대중공업 협력사에 채용될 예정이며, 1년 이상 협력사에서 적응 및 숙련과정을 거친 뒤 근무성적이 높을 경우 현대중공업 본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



- 대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강연은 미군 측의 요청으로 성사
-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7일 오산의 미 공군기지에서 국군포로 강연회를 열었으며, 강연회에서는 국군포로 출신으로 북한을 탈출해 지난 2000년 한국에 입국한 유영복 씨가 자신의 6.25전쟁 체험과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증언
 - 행사는 미군 측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유영복 씨의 강연에 대한 미군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고 북한인권시민연합 측이 설명
- **유해로 송환된 국군포로 손동식씨 보상금 놓고 갈등(연합뉴스, 11.28)**
- 지난달 5일 유골이 국내로 송환된 국군포로 손동식씨에 대한 보상금을 놓고 국방부와 유족이 갈등
 - 유족 측은 생환 국군포로에 준하는 6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유골로 송환됐기 때문에 유족연금 4천700만원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
 - 유족 측은 국방부에 ▲ 유골 송환비용 보상 ▲ 생환포로에 준하는 보상금 6억 원 지급 ▲ 손동식씨 사망일자 변경(1984년 8월 21일로 변경) 등을 요구
 -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유골 송환 비용은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급을 고민하고 있으나 유골로 송환된 국군포로를 생환포로로 대우해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유족 연금이 지급되는데 (손씨의 유족 측에) 일시금으로 4천7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
 - 국방부가 보상금 6억 원 지급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손씨 유족 측은 29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딸 손명화씨는 보상금 6억원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아버지는 북한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돌아가셨다"며 "생환 국군포로와 유해로 송환된 국군포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7. 대북지원

- **미한 NGO 대표 장애인 지원 방북(자유아시아방송, 11.27)**
- 북한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해온 미국과 한국의 민간 구호단체가 북한 고아들의 월동 준비와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해 이번 주말 북한을 방문
 - 푸른나무의 신영순 공동대표는 오는 30일 북한을 방문해 평양과 황해북도, 강원도 원산의 장애인 시설에 의료기구를 전달하고 7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가축 사육 현장과 장애인 취업을 위한 공장들을 돌아볼 예정
 - 신 대표는 이번 방북 때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교회가 마련한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전달했으며, 장애아들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가축 사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



- **스위스 NGO, 북에 태양열 가열기 전달(자유아시아방송, 11.27)**
 - 스위스의 대북 구호단체 아가페 인터내셔널은 최근 북한을 직접 방문해 고아원 어린이들이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도록 태양열 물 가열기를 전달
 - 아가페 인터내셔널은 아직 태양열 물 가열기를 설치하지는 못했지만, 평양에 있는 기술자와 함흥에 있는 고아원에 태양열 물 가열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왔으며, 혹한이 오기 전에 설치한 후 관계자 및 북한 관리들을 대상으로 태양열 물 가열기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

- **통일부 "세계은행과 북 원조 논의 없어"(자유아시아방송, 11.25)**
 -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을 돕기 위한 논의나 연구를 세계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건 없다고 밝혔으며, 이 발언은 "북한에 정치적 돌파구가 생기면 신속히 지원에 나서겠다"고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가 말한 가운데 제기
 - 세계은행의 한국 사무소가 12월 4일 서울에서 문을 여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세계은행이 북한을 돕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음.
 - 통일부는 한국 정부와 세계은행이 북한과 관련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을 부인
 - 현재로선 세계은행이 북한을 돕고자 한다고 해도 제약이 많은데, 김 총재도 22일 기자들에게 "세계은행이 북한을 돕기 위해선 북한이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세계은행의 회원국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

8. 북한동향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53호(11.24)】** 우리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로 유엔의 '北인권 결의안' 채택 관련 "反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이며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11.24, 중통·중방)

- 우리 정부의 '對北 외교'(11.18 서울, 美 국무성 북한인권특사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北 인권 논의-북핵 문제 등 회담)에 대해 '反北 대결정책 지지 구걸, 정치머슴꾼의 가련한 추태'라고 비난(11.25, 중통-노동신문-평방/외세의존에 환장한 매국노들의 추태)
 - 우리 정부의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 공동제안국 참여 및 '2013 北 인권백서' 발간 등에 대해 "우리(北)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부정, 모략행위"라고 再 비난(11.25, 평방/인권범죄자의 악랄한 정치적 도발)

-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및 채택에 대한 환영표시 등 관련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반인민적 악정으로



초래된 집권위기를 해소하며 민심의 불만을 탄 대로 돌려보려는 술책'이라고 지속 비난(11.26, 중통·노동신문·평방/인권유린 왕초의 악랄한 도발소동)

- '南 사회의 민주화 실현이 조국통일의 선결과제'라며 '진보세력을 말살하는 파쇼 폭압책동을 끝장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反정부 투쟁' 선동(11.27, 중통·노동신문/남조선 사회의 민주화 실현은 조국통일의 선결과제)
 - 「전교조」의 범외노조 및 「통진당」의 해산 움직임 등을 거론하며 "유신 독재자가 부활하여 살판치고 있는 듯하다"고 비난(11.27, 중통/살판치는 현대판 유신 독재)
- 「중통 논평」 우리 정부의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 참여와 '탈북자 中 공안기관 체포 연계' 주장 및 "괴뢰패당이 미국의 본을 따 인권재판관으로 행세하려들면서 인권을 떠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11.28, 중통/인권문제의 피고석에 앉아야 할 주범은 누구인가)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